의안 번호	70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의 원 : 전홍표・곽은정・권순재・김우진・김원일 박강우・박연정・박영주・박현재・배명갑 백승규・변보미・이무식・장병운・진형익 하경석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개체를 조기에 선발・개량할 수 있는 정확한 혈통정보 확보가 필수적임. 「축산법」에서도 가축 개량목표 설정과 개량기관 지정, 혈통・능력 심사등록 제도 등 국가 차원의 가축개량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우 개량정책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정밀육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한우 씨수소 조기 선발체계를 도입하고, 국가 단위 ‘한우 유전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암소 22만 두 중 우량암소 2,000두를 선발하는 등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유전체 개량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확한 혈통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일부 지자체와 지역축협 중심의 친자확인 사업은 지역 간 거래가 활발한 송아지의 특성상 전국적인 개량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일된 지원체계로의 확대가 필요함.

❍ 이에 정부가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사업을 국가 기반사업으로 확대하여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혈통등록·유전체 분석·계획교배·도축성적과 연계하는 국가 단위 정밀개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고 대한민국 고유의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재 일부 검정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역축협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사업을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대·표준화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혈통정보를 확보하도록 촉구함.

❍ 송아지 친자확인 결과를 혈통등록·유전체 분석·유전능력 평가·계획교배 및 생산·도축성적과 연계하여 출생부터 도축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한우 정밀개량체계를 구축을 요구함. 특히 '한우 유전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량암소와 우량송아지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한우 개량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함.

❍ 친자확인 및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농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의 혈통·유전체·생산성적 데이터를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관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정부에 건의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송아지 친자확인 및 유전체 기반 국가 한우개량체계 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지닌 소중한 유전자원이자 대한민국 축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그러나 사료비와 생산비 상승,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 한우 가격의 변동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단순히 사육두수 확대에서 찾기보다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개체를 조기에 선발하고 과학적으로 개량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우 개량 정책을 유전체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유전체 분석을 활용해 12개월령 단계에서 한우 씨수소를 선발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다. 기존에는 후보 씨수소 선발 이후 자손에 대한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가 되기까지 약 5년이 필요했으나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체계가 도입되면서 선발 기간을 약 1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암소 개량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정부,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정보를 국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가 단위 ‘한우 유전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유전체 분석 완료 암소 약 22만 두를 대상으로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1,022개 농가·기관에서 우량암소 2,000두를 선발하였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바로 송아지 친자확인을 통한 혈통정보의 정확성 확보이다.
유전체 분석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개체와 부모의 관계를 비롯한 기초 혈통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개량과 계획교배의 효율을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

현재 한우 친자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의 검정사업에서는 당대검정용 수송아지에 대해 부모와 조부모 등을 포함한 친자확인을 실시하고 유전체 분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축협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근 등에서 채취한 DNA를 활용한 친자확인 사업을 실시하여 가축시장 출하정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친자확인이 아직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와 송아지는 하나의 시·군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서만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 가축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거래되고 다른 지역의 농가에서 사육되거나 번식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우의 유전정보와 혈통정보는 행정구역을 넘어 국가 단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한우의 이동에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있지만, 한우의 혈통과 유전정보에는 지역의 경계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친자확인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확한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우량 송아지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가축시장의 거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친자확인을 단순히 ‘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친자확인 → 정확한 혈통등록 → 유전체 분석 → 유전능력 평가 → 우량암소·우량송아지 조기선발 → 맞춤형 계획교배 → 후대성적 검증 → 국가 한우 유전자원 축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국가 한우개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축산법」 제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개량·증식과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축의 개량목표 설정과 가축개량총괄기관·가축개량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을 심사·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개량을 위한 연구 현황도 국가 실태조사·통계작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친자확인 사업의 국가 확대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가 한우개량정책과 유전체 기반 개량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완성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확한 혈통정보는 한 농가만의 자산이 아니다.
전국에서 축적되는 혈통정보와 유전체정보, 생산·도축성적은 대한민국 한우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자산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한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대한민국 고유의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일부 검정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우 친자확인 사업을 국가 한우개량정책의 기반사업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친자확인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송아지 친자확인 결과가 혈통등록과 개체별 개량정보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지역 간 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 정보 연계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단위 '한우 유전체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친자확인·혈통정보·유전체 분석·계획교배·도축성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밀개량체계를 구축하고, 분석 결과가 농가의 씨수소 선택과 맞춤형 계획교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친자확인과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의 혈통·유전체·생산성적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대한민국 고유의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관리하라.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